

별첨

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

- 「2020년 경제정책방향」을 중심으로 정리 -

2019. 12. 23

금 융 위 원 회

||| 목 차 |||

[요약]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1

I .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2

II . 포용금융 기반 확충 7

III .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유지 11

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부문 주요과제 [요약]

[경제정책방향 정책목표]

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

1+4
정책방향

경제상황 돌파 +

혁신동력 강화 / 경제체질 개선
포용기반 확충 / 미래 선제대응

[금융부문 주요과제]

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

[혁신금융 가속화]

- ▶ 여신심사시스템 선진화
- ▶ 혁신분야에 정책금융 공급 확대
- ▶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

[신산업·주력산업 자금공급]

- ▶ 高科技·新산업 벤처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
- ▶ 주력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

[대상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]

- ▶ 지역벤처·창업 활성화 지원
- ▶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지원
- ▶ 연체 자영업자 재기지원

포용금융 기반 확충

[정책서민금융·채무조정 활성화]

- ▶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
- ▶ 채무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연체차주 신용회복 지원

[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]

- ▶ 소비촉진 등을 위한 편리한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
- ▶ 고령화 대비 주거비용 부담완화

[소비자보호 기반 확립]

- ▶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및 관행 개선

[공정경제·사회적 경제 지원]

- ▶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화 추진
- ▶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기반 강화

확고한 금융시장안정 유지

- ▶ 주담대·전세대출 규제강화 등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
- ▶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강화

[1] 혁신금융 가속화**① 여신심사시스템 선진화**

❶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하고, 여신심사시스템을 미래성장성, 기술력 중심으로 전면 혁신

- 일괄담보제도 도입, 인센티브 제공,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를 3조원 수준('20년말 잔액, IP포함)까지 확대

▶ (일괄담보제도) 기업이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산담보의 활용도*를 제고

* 동산자산 간 시너지 효과(예: 지식재산권이 체화된 제조기계) 등을 통해 담보가치가 제고되고, 개별취급에 비해 담보의 취득·평가·실행 절차도 용이해지는 효과

▶ (인센티브) 은행권기술금융 평가(TECH 평가)에 동산담보대출 실적을 반영 하거나 온렌딩 공급시 차등적용하는 방안 검토

▶ (회수지원기구) 금융회사가 동산담보 회수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완화 시키기 위해 동산담보물이나 부실동산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주는 기구 신설

* 필요한 재원은 '20년 예산을 통해 既 확보(400억원)

▶ (동산담보 제도개선) 장기 동산담보대출을 위한 담보권 존속기한(5년) 폐지, 이용자 범위 확대(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도 허용) 등 추진

- 기술-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('20년~)

*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계기로 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
①기업여신프로세스, ②기술평가체계 및 ③TECH 평가체계를 개편

② 혁신분야에 정책금융 공급 확대

❶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집중 지원

- 중소·중견기업의 신·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.5조원* 규모의 「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신설(1년간 한시운영)

* ①산업은행 2조원 + ②기업은행 2조원 + ③수출입은행 0.5조원

- ▶ 운영기간: 1년간 한시운영
- ▶ 지원대상: 중소·중견기업 신·증설 투자
- ▶ 대출만기: 최대 15년
- ▶ 금리: 최저 1.5%의 특별우대금리 적용(단,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)
* 대출 시작일로부터 '24.12.31일까지 특별우대금리 적용 → 이후 통상금리 적용

- 「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(산·기은)」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시설·운영자금 등에 3조원 공급('19~'21년중 10조원 공급)
-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원을 차질없이 공급
- 제조업 스마트화·친환경화 등 지원을 위한 「환경·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」 1.5조원 집행('19~'21년중 5조원 공급)

< 2020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(관계부처 합동) >

-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('19년 대비 +43.3조원)하여 중소·중견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
* 산은, 기은, 수은, 중진공, 신보, 무보, 지신보, 기보 등

③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

① 사모펀드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지속 추진

- *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, 현행 PEF를 기관만이 투자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여 규제·감독 완화 등

② 벤처·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(NCR) 완화 등을 통해 초대형 IB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

- ▶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(최대 32%만 차감) 등
- ▶ 중소·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을 조정
* (현행) 특정기업 주식 5% 초과보유시 위험액 산정시 50~200%의 개별위험액 가산 (개선) 중소·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 부담 경감
- ▶ 경영참여형 사모펀드(PEF)의 운용사(GP)로 참여시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
* (현행) PEF 전체자산에 대해 위험액 산정 (개선) PEF 전체자산 중 유한책임투자자(LP) 출자분은 제외하고 위험액 산정
- ▶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중소기업 범위(중소기업 대출 규모 산정)에서 특수목적회사(SPC) 및 부동산업과 관련된 법인을 제외(자본시장법 개정)

[2] 신산업·주력산업 자금공급

① 高기술 · 新산업 벤처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

① 민간 주도의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

- 금융·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·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 구축

▶ (금융) 금융데이터를 매개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('20.上),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 개방 확대('20.下), 금융 마이데이터 지원

② 5G 상용화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 및 창업지원

- 통신사, 창업·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'5G 창업보육 공간(마포 Front 1)'을 조성하여 창업·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간 협력 추진

③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·보증 공급

* '19~'21년간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30조원 공급

④ 창업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

▶ '20년 3.2조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(정부 0.4조원 출자)를 조성하여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 공급

▶ '20년 2,000억원 규모 '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'(기보) 및 1,000억원 규모 '혁신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'(신보)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자금 공급

⑤ 첨단 혁신성장분야(첨단제조·신소재·바이오·콘텐츠 등)에 민간매칭으로 혁신분야 투자펀드 조성

▶ 투자펀드: 한국 성장금융과 민간기업 은행권 등이 연계하여 핀테크, 시스템반도체, 제조업 혁신 등에 투자하는 총 3개 약 4,0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 추진('20년)

2 주력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

- ① 주력산업 P-CBO로 중소·중견 기업 회사채를 '20년중 1조원 매입(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검토)
 - 또한,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·보증 만기 1년 추가 연장(~'20.末)
 - *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②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제·금융 등 지원 강화
 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*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(기존 보증 만기연장,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)
 - * 신용보증기금 7,500억원, 기술보증기금 2,500억원
 - 「해외 M&A·투자 공동지원 협의체*」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M&A 및 시설 투자 등을 종합 지원
 - *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, 수은), 시중은행,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참여하여 해외 M&A 인수자금, 컨설팅, 사후통합관리 등을 지원(2.5조원 이상)

3 대상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

1 지역벤처·창업 활성화 지원

- ① 지역벤처·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
 - 산은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(Open Innovation Fund)를 대구·경북권 등으로 확대
- ▶ (현행) 동남권(413억원), 광주·전남권(211억원) 조성완료
→ (개선) 대구·경북권 등으로 추가펀드 조성

②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지원

① 소상공인·자영업자,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 2.7조원 공급(기은, '19년 대비 +0.4조원)

② 자영업자 신용평가체계를 기술력·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개편*

* (1단계 20년) 성장성 기술력 등을 감안한 전용대출 시범운영 → (2단계 22년) 성장성 기술력을 반영한 대출상품의 은행권 확대 → (3단계 25년) 자영업자 평가모형 개편

③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'플랫폼 매출망 금융' 방안 마련·추진

▶ 은행 등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성, 매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

▶ P2P 등 새로운 대출 플랫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쉽게 어음, 매출채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

* 예: 온라인마켓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연계대출 활성화

③ 연체 자영업자 재기지원

① 법인형태의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채무*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 채무조정·상환유예

*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인 2.8만명의 연대보증채무 5.4조원 대상

② 연체 휴·폐업자에 대한 「자영업자¹²³ 재기 지원프로그램」을 통해 채무조정, 재기자금 지원,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('19.11월~)

▶ 채무조정: (현행) 채무조정 이후 최대 8년간 분할상환 허용

→ (개선)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허용, 이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

▶ 자금지원: (현행) 연체채무자의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 제한(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)

→ (개선) 채무조정 확정 즉시 질적심사를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(50억원)

▶ 컨설팅: (현행) 재창업자금 지원이 확정된 자영업자가 희망할 경우 컨설팅 제공

→ (개선) 재창업자금 신청시 사전컨설팅 실시 및 대출 심사시 컨설팅 결과 참고

[1] 정책서민금융 · 채무조정 활성화

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

- ①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,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¹⁷ 공급규모 확대('19년 4천억원 → '20년 5천억원)
- ② 미취업 청년·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^{youth} 출시('20년 1천억원)

< 햇살론¹⁷ 및 햇살론^{youth} 개요 >

	햇살론 ¹⁷	햇살론 ^{youth} (案)
지원대상	저신용·저소득자	미취업 청년·대학생 등
금리	연간 17.9%	연간 3~4%
한도	700만원(최대 1,400만원)	연 600만원(최대 1,200만원)
상환·거치기간	최대 5년 (거치기간 없음)	최대 7년 (거치기간 최대 8년)

- ③ 정책금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,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금공급*(중금리대출) 유도

* '19년중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7.6조원 공급

- ▶ 정책서민금융 : 햇살론17 공급확대 등을 통해 저신용자(7등급 이하)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중신용자는 민간시장으로 유도
- ▶ 중금리 :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, 금융회사 자체 상품개발 · 신용평가역량 제고를 지원

- ④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 5년 연장(~'20년 → ~'25년) 및 출연규모 확대*

* 연 1,750억원(5년 총 8,750억원) → 연 1,900억원(5년 총 9,500억원)

- 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의무 출연 대상을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고, 출연규모도 확대하는 출연제도 도입 추진

* (현행) 상호금융,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출연 → (개선) 전 금융권으로 확대

② 채무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연체차주 신용회복 지원

- ① 연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연체를 최소화하고, 연체발생時 신속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지원

연체기간	채무조정
·연체전~연체 30일	·신속지원제도(긴급상환유예,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)
·연체 30~90일	·프리워크아웃(이자감면, 장기분할상환)
·연체 90일~채무상각前	·개인워크아웃(원금 최대 30% 감면 등)
·채무상각 이후	·개인워크아웃(원금 최대 70% 감면 등)

* 상환불능 취약채무자는 채무원금은 최대 90% 감면, 3년 성실상환時 잔여채무 면제 등

- ② 대출계약 체결 후 연체채권 처리까지 대출의 모든 단계에서 채권자-채무자 권익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신용 규율 체계 마련

*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및 연체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 추진

(2)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

① 소비촉진 등을 위한 편리한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

- ① 휴면재산·카드포인트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▶ 쏘 금융권 「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(11.11~12.20)」 실적 분석을 통해 '20년에도 휴면재산 찾기 캠페인 실시

▶ “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·지급 서비스”를 확대하여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·장애인을 직접 방문·서류 작성 등 지원

* 독거노인 대상으로 생활관리사가 신청서 작성·제출 등 지원중('19.10~)
→ 독거노인 + 취약계층 노인(거동불편 노인 등) 및 장애인 등으로 확대

▶ 생활관리사 등을 통한 휴면재산 조회·지급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령층·장애인이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時 7% 할인

▶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* (현행)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
→ (개선)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 추가

- ②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(보험업·의료업 등)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·개정 추진

▶ (현행) 병원비 수납→병원 증명서 발급→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서류 전송→보험금 지급
→ (개선) 병원비 수납+병원에 보험금 청구서류 전송 요청→병원이 서류 전자송부→보험금 지급

② 고령화 대비 주거비용 부담완화

- 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'전세대출보증+전세금반환보증' 결합상품 신규 출시('20.6월)

- ②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금의 보장성 강화

▶ 가입연령을 하향조정(60→55세 이상)하고,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현실화(시가 9억원 → 공시가격 9억원)
▶ 저소득 고령층(1.5억원 이하 1주택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)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지급율 상향(일반형 대비 최대 +13% → +20%)
▶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개선

[3] 소비자보호 기반 확립

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및 관행 개선

- ① 금융소비자 보호 법적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권리 도입,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, 실효적 피해구제 등 추진

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 및 제정 시 하위규정 마련

▶ 위법계약 해지권, 청약철회권, 자료제출요구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
▶ 징벌적 과징금 신설,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 제재 강화
▶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,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회피방지 등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
▶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·시행에 맞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체계 정비

②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 우려없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

* '18년 기준, 금융권 전체 연간 분쟁민원 중 보험분야가 약 61.8%를 차지

- ▶ 기존 텍스트 중심의 약관을 인포그래픽, 동영상(QR코드와 연계) 등으로 시각화
- ▶ 약관을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특약 부가 제한(가입실적이 낮은 특약 부가 금지 등)
- ▶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(일반국민 참여 대폭 확대,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등)

③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

- ▶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 점검 강화

* (현행)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중심으로 점검 →
(개선) 실제 판매사항을 표본조사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

- ▶ 고령금융소비자(기준중위소득 125% 限)와 금융회사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법적지원 강화

*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, 소송대리 지원 등 무료법률구제 지원

④ 과장·자극적 표현* 금지, 소비자 부담사항(중도해지수수료, 원금 손실 등) 필수 전달, TV광고 규율 강화** 등 금융광고 개선

* 무한보장, 만능, 무차별, 누구나, 마지막 기회, 전액보장, 한방에, 100% 등

** 생방송 허용범위 : (현행) 모든 보험상품 → (개선)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
(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자크기, 말하는 속도 등도 규율)

⑤ 대출 등 금융거래 시 요구서류 일제 정비* 및 금융권 행정 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서류 부담을 대폭 경감

* (사례) 자동차할부금융 이용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함에도 인감증명서 요구

**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금융회사 확대 추진(※ 금융권 수요 +57개사, 44%↑)

[4]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

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화 추진

①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등을 통한 금융그룹 감독체계 제도화

▶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의 법제화* 노력을 지속하고,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」 개정 및 연장**(20.7월, 1년)

* ① 원활한 국회 법안심사를 위한 입법지원,

② 국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(예: 카드뉴스, 칼럼기고) 등

** '18.7월, 7개 금융그룹(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, 롯데) 시범적용 대상 지정
→ 연장시 감독대상 금융그룹 재지정 등 검토

▶ 그룹차원 위험의 관리를 통한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그룹 감독제도 보완·개편

* 금융그룹 리스크 평가방안을 마련, 금융그룹 계열사 신용공여 현황 등 주요 위험요인 공시 추진

②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기반 강화

① '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*'을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('20.下)로 평가모형 지속보완

* 신보가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으로, 모형·웹시스템 구축 완료('19.10월)

②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(서금원 홈페이지 內)를 개편하여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* 제공 확대('20.3/4)

* 대출형·투자형 중개기관 현황,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·현황, 해외사례 등

3 확고한 금융시장안정 유지

① 주담대·전세대출 규제강화 등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

①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內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

*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,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, 시가 9억원 초과주택 차주에 대한 DSR 적용

②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

* 전세대출 후 시가 9억 초과 신규주택 구입 또는 2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,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

③ 은행권 예대율 규제*('20.1월~) 등을 통해 가계대출 유인 축소

* 예대율 규제 관련 대출금액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% 상향하고, 법인 대출 가중치는 15% 하향조정

②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강화

【 구조조정 진행중 기업(회생기업) 】

- ① 기업구조혁신센터(캠코)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C·D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, 회생절차 기업정보를 적격투자자에게 제공
- ② 자동차·조선 등 주력산업(제조업 등)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, 운용방식을 개선

▶ 운용규모 확대 : '20년중 운용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(1.6→2.6조원)하고,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

▶ 운용방식 개선: ①제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대해 모펀드 출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(현행 : 모펀드 50%, 민간 50%)

②운용사가 주력업종 등에 투자시 관리보수 상향 조정 등

- ③ 부실채권시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암코의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구조조정 분야 투자 비중 확대

* 유암코 투자잔액('19.6말) : 부실채권 2.4조원, 기업구조조정 1.4조원

** 장기보유채권 매각 및 자본금 증자 등 구조조정 기능 확대 방안 마련

- ④ 회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M&A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·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생절차 협의 지원 강화

▶ 채권은행 : (현행) 회생절차 진행 중(M&A 포함)이라도 담보권 실행 및 채권매각 可
→ (개선) ①DIP금융 공급(캠코, 중진공 등) 기업에는 담보권 실행 유예
②M&A 진행중인 기업은 6개월간 채권매각 보류

* 산·기은 및 시중은행(KB, 농협, 수협, 신한, 우리, 하나)과 MOU 기 체결(금융위, '19.11월)

▶ 신보 : (현행) 보증금액의 30% 이상을 회수가가능할때만 회생계획안 동의 可
→ (개선) 25%로 기준 완화, M&A 진행중일때는 15%로 완화

- ⑤ 회생법원-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P-Plan,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(ARS) 등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기업 정보 공유 등 협의 강화

-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운영자금 지원하는 DIP* 금융 확대

* Debtor In Possession 금융 :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,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

- ▶ 소기업 : 지원규모가 20억원 이하인 기업은 캠프 중진공 등이 직접 지원(연간 400억원)
 - ▶ 중대기업 : 개별 지원액이 많은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* 조성 후 간접지원(年 2,000억원)
- * 캠프(연간 600억원 투자) + 한국성장금융 + 민간투자자(GP, LP) 참여

⑥ 회생절차 중 DIP 금융을 활용중인 회생기업 부담 경감

- ▶ 회생기업이 세일앤 리스백(SL&B) 프로그램을 통해 캠프에 자산 매각이후, 경영여건 개선으로 동일자산 재매입시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취득 계약방식* 도입 (동일자산 재매입시 취득세 감면방안도 추가 검토**)

* 2년 이상에 걸쳐 매입대금을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며 취득하는 방식

** 캠프 S&LB 프로그램에 대한 취득세 감면(50%) 일몰('20년말) 연장 검토시 병행 검토

【 구조조정 졸업기업(회생종결기업) 】

- ①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생종결기업에 대해 캠프·중진공의 운영자금 대출 및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 실시
- ② 회생종결기업에 대한 민간은행들의 운영자금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 등에 신·기보 보증 지원

※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마련('20.4월)